

입법정책정보

-제23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2. 도로법 시행령	16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22
1.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22
2.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25
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27
4.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1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34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41

I 상위법령 제 ·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2.] [대전광역시조례 제6228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일

4. “마을공동체”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

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

제3조(소규모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19.>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⑤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은 100분의 30을 증가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2.8.12.>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는 100분의 2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⑦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1.2.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빈집의 철거명령으로서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 <삭제 2024.3.22.>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1조(주민합의체) ①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2.>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3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4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받으려는 경우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1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2.>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20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2.8.12.>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

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

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

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22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사업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23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3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영 제38조의2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구역·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제23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명칭의 변경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접하고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범위의 변경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결정내용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23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2.>

1. 영 제40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계량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주택건설계획

제2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2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2.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3.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4조(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조사비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법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제2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대상시설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④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8.12.>

제27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

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2021.2.19.>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용적률의 상한 = $A + (B - A) \times C / 20$

A: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임대주택 비율 <개정 2022.8.12.>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

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3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3.3.22.>

⑤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3.3.22.>

제28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영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제5장 보칙

제29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30조(관계 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조합의 해산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 관계 서류

제6장 벌칙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영 제46조 각 호외의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515호, 2024. 10. 25.,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을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법인·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법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 5., 2024. 10. 2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05.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60호, 2024. 0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2. 11>
4.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5.17.>

가.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4.5.17.>

나. 시민 휴양·운동·편익·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 <신설 2024.5.17.>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6.28.>

부칙 <조례 제6260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1. 8.] [광주광역시조례 제6458호, 2024. 11. 8., 제정]

□ 제정이유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으로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방송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공익목적의 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송활동가”란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가청권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및 재난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의 발전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자문
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조사
3.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라디오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학과 교수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동체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공동체라디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시행 2024. 11. 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조례 제5428호, 2024. 11. 01.,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부패·청렴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평가

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5428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0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22호, 2024. 11. 01., 제정]

□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원이 전북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원이 소속된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도립국악단원
4.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직장운동경기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제6조(정원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② 그 밖에 정원의 책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무원 채용기준, 결격사유,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전보) ① 공무직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무원 전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신분증) 도지사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행정망)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①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도지사는 공무원의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6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7조(휴직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명예퇴직) 공무직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20조(후생복지) 도지사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양성평등) 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노사협의회)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표창) 도지사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건강진단)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신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산업안전)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제30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1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칙 <2024. 11. 1. 조례 56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11.] [경상북도조례 제5152호, 2024. 11. 11., 제정]

□ 제정이유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 확대를 통해 경상북도 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 확대를 통해 경상북도 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지역 내 특색 있는 음식문화 등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고유한 음식 문화나 도내 특산물, 특화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음식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3. 도내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발굴·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수요자 맞춤형 음식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3.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지원

4. 음식관광 관련 실태·수요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기능)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방문객 증대 등을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411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의뢰안전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도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해 도지사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사무”란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이하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건의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고(제1호), “결의안”이란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은 건의안 및 결의안의 처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2조에 따른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의 발의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권한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변하여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바(각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2, 122쪽 참조), 건의안등의 내용에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의안등의 발의가 다른 기관의 권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건의안등의 발의와 처리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국가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건의안”은 의원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결의안”은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외부에 ‘표명’ 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의안 형태인바, 이러한 건의안등의 생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는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 표명 권한을 행사하여 건의안등을 발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외부에 건의안등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건의안등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건의안등의 처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건의안등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건의안등의 처리에 대하여 의장이 건의안등을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하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려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의회 의사의 외부 표명·전달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건의안등의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428 /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 의뢰안건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서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서 광주광역시시장에게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을 하고(제5조제1항), 광주광역시장은 보조금 예산 편성 후 예산심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하며(제6조제1항), 서구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제7조),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부 조건을 붙여(제9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제8조).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서구가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서구가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은 서구의 세입으로서 ‘시·도비보조금’ 과목으로 서구의 예산에 편입되고(「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별표 8), 서구는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지방보조금법 제13조),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고(제24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실적을 광주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광주광역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제27조).

살피건대,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서구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지출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지와 무관하게 서구의 예산에 편입되고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되는바(각주: 법제처 2020. 12. 2. 의견제시 20-0291 참조),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보조금이 서구의 예산으로 편입된 후 서구 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재원 전액이 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서구의 보조금 지출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치이지, 그 보조금의 집행사무가 보조금을 교부한 광주광역시 소관의 사무이거나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 시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제1조), 교부되는 보조금의 범위에서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제5조제2호) 등을 특정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바, 이러한 주민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28. 의견제시 23-0372 참조).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이 사안의 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의 근거법령인 「도시철도법」에서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귀 기관의 재정적 상황, 지역 주민들의 피해 규모, 생활환경 및 다른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귀 구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28. 의견제시 23-0372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 주요내용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 및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광고, 할인, 공고 및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튀르키예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이커머스 기업은 법인세, 디지털서비스세 및 디지털광고 원천세 납세의무자 또는 전자상거래규제법에 규정된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튀르키예 소재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이러한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면허세 납부의 부담도 추가적으로 짐으로써, 외국 이커머스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튀르키예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규제법」을 개정하여 국내 기업의 조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다.

-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해외 판매액과 산업기술부가 발급한 투자인센티브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허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당해연도 순거래량에서 공제한다.
- 2024년분 면허세 계산 시에는 해외 판매액 및 투자액의 4배, 2025년분 면허세 계산 시에는 해외 판매액 및 투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거래량에서 특별공제한다.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국외 전자상거래 활동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이번 개정은 튀르키예 사업가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11. 26.